

# 북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제1138호 2023. 2. 22. (수)

.....

## 발령

훈령 제351호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2
예규 제182호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3

## 고시

제2023-17호	도로명주소 고시문	—12
-----------	-----------	-----

## 공고

제2023-209호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3
------------	--	-----

공										
람										

## 발령

○부산광역시북구훈령제351호

###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2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건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규정은 부산광역시”를 “규정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업업무를 수행하는 부산광역시”로, “근로자”를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이하 “근로자”라 한다)”으로 한다.

제8조 중 “총무국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 선임하고”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로서”로, “관리하도록 하여야”를 “관리하여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가목 중 “인사·노무업무 총괄 국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공동위원장일 경우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 제·개정(폐지) 이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 선임에 따른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안전보건관리 규정 적용범위 구체화
-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변경 선임에 따른 관련 내용 정비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을 이에 발령한다.

2023년 2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북구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절차의 투명성과 직무수행의 적정성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의 “휴대용 보호장비”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말하며 각각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의 영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하여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포함)(이하“영상”이라 한다)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영상과 음성의 녹화 및 녹음

나. FullHD급(1920×1080) 해상도 이상

다. 녹화 시야각 120° 이상

라. 녹화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마. 영상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2.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 등 위법행위의 음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체나 근무복 등에 부착 혹은 착용 등을 통해 직무수행과정을 근거리에서 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로서 다음 각 목의 기능을 갖춘 것을 말한다.

가. 음성의 녹음

나. 녹음 여부가 외견상 인식 가능

다. 녹음기록의 암호화 등 파일 보안

3. "영상기록"이란 휴대용 영상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화된 영상기록물을 말하며, "음성기록"이란 휴대용 음성기록 장비를 사용하여 녹음된 음성기록물을 말한다.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휴대용 보호장비에 부착·결합된 저장장치를 말한다.

5.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이란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지정한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란 영상기록, 음성기록 및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있는 정보를 관리·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7. "시스템 관리자"란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실제 운용하는 부서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권익보호)**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필요한 한도 내에서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되,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이 지침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하여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 제2장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

**제4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욕설, 협박, 성희롱 등)을 하는 경우
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협하거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 등(이하“위법 행위 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가. 위법행위 등을 하고 있거나, 위법행위 등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 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있을 경우

**제5조(사용자 준수사항 등)** ①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녹화 또는 녹음 시작과 종료 전에 녹화 또는 녹음 시작 및 종료 사실을 고지. 다만, 녹화 또는 녹음 사실을 사전에 고지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현장 상황이 긴급한 경우 등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등록할 때에 고지를 못한 사유를 기록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녹화 또는 녹음을 마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지체 없이 시스템 관리자를 통해 휴대용 보호 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저장
3.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 또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가 아닌 곳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저장·전송 금지
4. 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정보의 임의 편집·삭제 금지
5. 시스템 관리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전송 시 관리번호, 녹화제목(녹음제목), 녹화일(녹음일), 녹화내용(녹음내용) 등을 입력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
6. 사용을 마친 휴대용 보호장비는 즉시 제7조에 따른 입출고 담당공무원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반납

②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영상·음성의 녹화·녹음, 휴대용 보호장비의 자료 저장 상태 확인
2. 휴대용 보호장비 장애의 경우 자체진단·고장신고 및 장애기록 유지
3. 휴대용 보호장비에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로 실시간 전송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확인
4. 휴대용 보호장비 및 관련 기기 운영·관리

**제6조(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 휴대용 보호장비의 운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 연결된 때에만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하는 체 계를 갖출 것. 다만, 휴대용 보호장비를 피탈당하는 경우 등을 대비하여 영상기록 또 는 음성기록을 무선 방식으로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실시간으로 전송 하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
2.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송한 때에는 휴 대용 보호장비 저장장치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삭제할 것
3. 구에서 보급한 장비만 사용하는 등 상호운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

**제7조(관리책임자 및 입출고 담당자 지정)** ① 휴대용 보호장비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 : 사용부서 부서장
2. 부 : 사용부서 총괄 담당

②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의 입·출고를 관리할 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담당공무원은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으로 입·출고를 관리한다. 이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서 입·출고 내역을 출력하여 수기 대장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부 ’관리책임자를 입출고 담당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제3장 기기관리 및 보안 등

**제8조(휴대용 보호장비 관리)** ① 휴대용 보호장비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에서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휴대용 보호장비는 사용부서를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의 분실, 파탈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휴대용 보호장비 보안관리)** 휴대용 보호장비에 대한 보안대책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관리책임자만 접속
2. 무선으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전송 시 암호화하여 전송

**제10조(휴대용 보호장비 저장소의 지정 및 운용)** ①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에 담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전용으로 저장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및 장비(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 포함)를 갖추어야 한다.

②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고소, 고발 등(이하 ‘법적조치 등’이라 한다)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개월간 보관할 수 있으며, 법적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그 기록을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고소, 고발 등을 위해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수사기관 등에 제출이 필요하여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 한한다.

③ 휴대용 보호장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자의적으로 편집이나 삭제가 불가능하도록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설계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휴대용 보호장비 정보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저장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은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⑤ 각종 접속기록은 1년간 보관한다. 또한, 시스템 접근권한에 대한 부여, 변경 또는 말소에 대한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3년간 보관한다.

⑥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에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갱신하여야 한다.

⑦ 관리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 또는 개인음성정보가 유출되거나 오용·남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인의 열람 등 요구)** 민원인의 영상 및 음성 열람 등 요구에 대하여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 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44조를 준용한다.

## 제4장 기록물 관리 및 교육

**제12조(영상·음성기록 증거물 작성)**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을 증거물로 제출하고자 할 경우 휴대용 보호장비 시스템을 이용하여 영상파일 또는 음성파일을 CD, DVD 등의 형태로 제작하고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 표면에 일시, 장소, 민원처리담당자 성명, 민원인 성명 등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영상기록 또는 음성기록 증거물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 교육)** 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최초 사용 전에 1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내용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법, 사용지침, 개인정보보호 등에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자에게 제1항의 교육내용을 연 2회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제14조(그 밖의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내용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부 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영상(음성)기록 증거물 관리 현황 (제5조제5호 관련)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입출고 현황 대장 (제7조제2항 관련)

[illegible]

[별지 제3호서식]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등록대장 (제8조제1항 관련)

[illegible]

#### ■ 제·개정(폐지) 이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2022. 7. 11.),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휴대용 보호 장비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안전한 환경 제공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지침을 제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가. 제정 목적, 정의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제1조 ~ 제3조)
- 나.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등에 관한 사항(제4조 ~ 제7조)
- 다. 기기관리 및 보안 등에 관한 사항(제8조 ~ 제11조)
- 라. 기록물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제12조 ~ 제14조)

## 고 시

○부산광역시북구고시제2023-17호

### 도로명주소 고시문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 ○ 도로명주소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1길 90-4 (덕천동)

#####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지번)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0건)				

##### ▷ 도로명주소 변경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변경고시일	변경사유
(0건)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폐지사유
덕천1길 90-4	2023-02-22	건축물대장 말소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3. 2. 22.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부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2월 22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기본원칙, 구와 구민의 책무(안 § 1~§ 6)
- 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등(안 § 7~§ 9)
- 다. 부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안 § 10~§ 17)
- 라.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안 § 18~§ 25)
- 마.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안 § 26~§ 31)
- 마. 경과조치 및 적용례 등(안 부칙 § 1~§ 4)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3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1570번길 33(부산광역시 북구 학사로 11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051-309-6293, FAX 051-362-6500, E-mail : ji1913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성·반대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 정보공개 → 북구소식 → 입법예고)

붙임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부산광역시 북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며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계획·사업 및 필요예산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부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①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구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2장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계획

**제7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구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하며 이를 제8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의 계획과 구의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 제3장 부산광역시 북구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제10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구청장은 구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비전 및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연직위원 : 구 소속 각 국의 국장 및 관련 부서 부서장
  2. 위촉직위원 :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예방 및 적응, 에너지·자원, 녹색기술·녹색산업, 정의로운 전환 등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사안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을 하거나 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4장 온실가스 감축 및 적응 시책

**제18조(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구청장은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신·재생에너지 전환)**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체육관·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시설 보급·이용을 촉진하여야 한다.

**제20조(녹색건축물의 활성화)** ① 건축물의 신축 등을 하는 자와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절차를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건축물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기준·절차를 준수하는 자에게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녹색교통의 활성화)** ① 구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고 자동차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와 운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동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감축을 위하여 도심의 자동차 운행 제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차 없는 날 또는 차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도심에서의 자동차 운행을 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자전거 등 친환경교통수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친환경차 보급 확대)** 구청장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제4호·제6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친환경차”라 한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하며,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탄소흡수원 확대)** ① 구청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사업자 또는 구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24조(지역 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매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고 통계의 투명성·정확성·완전성·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지역 물관리 사업)** 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구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등

**제26조(협동조합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방법·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27조(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① 구청장은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이하 “실천연대”라 한다)에 참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천연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라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산·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구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1. 탄소중립, 환경관련 홍보를 위한 홍보물
2. 탄소중립,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등
3. 탄소중립,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
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9조(국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의 교환, 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탄소중립이행책임관의 지정)** 구청장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탄소중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탄소중립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탄소중립이행책임관으로 지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또는 「부산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은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적응대책이 최초로 수립될 때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계획·대책으로 본다.

**제4조(적용례)** 제7조에 따른 감축목표를 최초로 수립할 때의 목표연도는 2030년으로 하고 기준연도는 2018년으로 한다.